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 대전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김용규

## 보도자료 2021. 9. 8.(수)

자료문의 : 특허범죄조사부장  
(전화) 042-470-4309 (FAX) 042-470-4226

제 목

### 『제1회 기술유출·침해범죄 대응 유관기관 회의』 개최

- 대전지방검찰청(검사장 노정환)은 오늘 15:00 중소기업부 · 공정거래위원회 ·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「제1회 기술유출·침해범죄 대응 유관기관 회의」를 개최하였습니다.
- 오늘 회의에는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과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, 중소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,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 등이 참석하여, ① 개정 형소법 하의 기술유출·침해 범죄 대응 방안 ② 특허청 기술경찰 출범에 따른 수사전문성 강화 방안 ③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.
- 향후 대전지검은 유관기관과의 정기적 교류를 바탕으로 '선제적 기술 범죄 대응 모델'을 구축,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첨단기술 유출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## 1

### 개최 배경

- 최근 美·中 간 무역분쟁,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앞당긴 IT, 바이오 기술발전 등으로 첨단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,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됨
  - ※ 해외 기술유출 피해액은 최근 5년간 20조원 이상으로 추정('20. 11. 국회 정보위 국감)
- '21. 1.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, '21. 7. 특허청 특사경 조직 확대 등 수사 환경도 변화되어, 기술범죄 대응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

- 대전지검은 '15. 11. 특허범죄 중점검찰청 지정, '18. 2. 특허범죄조사부 신설을 통해 그동안 축적한 국내외 기술유출·침해범죄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보호 업무 수행 유관기관 회의 개최

## 2 회의 개요

- 일시·장소 : 9. 8.(수) 15시, 대전지검 3층 PT룸
  - 참석자
    - 대전지검(7명) : 검사장, 차장검사, 특허범죄조사부장 및 검사 4명
    - 특허청(3명) : 산업재산정책국장, 기술디자인특사경과장, 부정경쟁조사팀장
    - 중소벤처기업부(2명) : 기술혁신정책관, 기술침해행정조사팀장
    - 공정거래위원회(1명) : 기술유용감시팀장
- ※ 해외 기술유출을 담당하는 국정원 관계자도 참석하였음

## 3 주요 논의 내용

### ① 개정 형소법 환경에서 투트랙(two-track) 기술범죄 수사

- (직접수사) 개정 형소법 하에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가 가능한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(국가핵심기술, 첨단기술 보호),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(기업 영업비밀, 노하우 보호)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중소기업 기술자료 등 보호)위반죄 중 중요 사건은 대전지검이 적극 수사
  - '19. 1. 도입된 「전문사건 이송 및 직무대리 기소제도」를 통해, 대전지검 관할이 없는 사건도 이송받아 수사·기소 가능
    - ※ 대전지검은 위 제도 도입 후 영업비밀 사건 4건 등 지식재산권 전문사건 28건 기소
- (특사경 지휘·협력)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 조직 확대에 발맞추어 특사경의 압수수색 시 검찰 포렌식수사관 현장지원, 특사경에 대한 멘토검사·수사관 지정 및 수시 사건 협의

## ② 특허청 기술경찰 출범과 수사·조사역량 강화

- (특사경 조직 확대) '21. 7. 기존 1과(산업재산조사과) 체제의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2과 1팀(기술디자인특사경과·상표특사경과·부정경쟁조사팀)으로 확대·개편하고, 전문 수사인력인 「기술경찰」을 출범  
- 기술경찰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 침해, 부정경쟁행위, 특허권침해 등을 수사
- (조사역량 강화) 특허청은 금번 조직 개편 시 별도의 행정조사 전문 부서인 '부정경쟁조사팀'을 신설, 정부부처 등의 전문기술 분야 조사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고, 기술유출 관련 실태를 파악·수집

## ③ 기관 간 협력·공조강화 논의

- (중소기업 보호)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피해행위 조사(중소벤처기업부),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기술유용 행위 조사(공정거래위원회) 등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행정조사와 수사의 연계방안 논의
- (실무회의 정례화) 향후 각 기관의 기술유출·침해 대응 실무진이 참석하는 회의를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여, 첨단기술 트렌드, 기술유출 실태, 효율적 대처방안 등 논의 예정

## 4 향후 계획

- 대전지검은 기관 간 정보 공유, 초동 조사, 수사 및 공판에 이르는 쏠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「선제적 기술범죄 대응 모델」을 구축하여, 특허·영업비밀 등 핵심기술 유출·침해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음 